



## 그리스, 민간채권단 손실 분담률 협상 난항

정인영 연구원

### ■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 간의 국채 손실 분담률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- EU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민간채권단의 국채 손실 분담률을 50%로 늘리는데 합의하였으나, 분담률을 둘러싼 세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빚어지고 있음.
- IMF는 현재 그리스에 진행 중인 재정적자와 공공 부문 부채 감축 프로그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민간 채권단의 손실 분담률을 당초 50%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.
- 아직까지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 간에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손실 분담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민간채권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협상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.
- 그리스는 오는 3월 20일 140억 유로 규모의 채권만기가 도래하여 조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므로 협상 지연으로 인해 금융지원이 늦어질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음.

### ■ 한편 그리스 국채를 대량 보유한 상당수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국채 상각 교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협상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.

-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국채 순현재가치(NPV)의 50% 이상 손실을 포함하는 교환을 거부하며, ECB와 그리스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채 손실을 떠안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.
- Duke 대학의 Mitu Gulati 교수는 헤지펀드 투자자들을 협상 지연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하며, 이들은 올 3월 이전에 그리스가 디폴트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3월 국채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늦추는 것이 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.
- 한편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대형 은행들이 지난 몇 개월 간 헐값에 매도한 그리스 국채 대부분을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매수한 것으로 알려짐.
- 구제금융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그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됨.

- 이에 3일(현지시각)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2차 구제금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며,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IMF와 EU, 민간채권단의 긴밀한 협조를 촉구함.

(NYT, FT 등, 1/10)